금융시장·국가 신인도 영향 미미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경제 영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나 전문 기관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메가톤급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국내 증시나 한국의 대외 신인도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회적·정치적 분열이 심화된다면 자칫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추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반 영향은 미미=국제금융센터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내외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긴급 보고서를 통해 일부 외신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국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험에 비춰 경제와 직접 관련이 약한 정치적 사건이나 북한 관련 사건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증시는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때는 물론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4월 로켓 발사 등에도 강한 내성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는 코스피지수가 6개월 만에 장중 1,300선을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는 등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 등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관련법의 처리에도 영향을 줘 개별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경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재계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가적 불행”이라며 애도를 표명하고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 늦은 시간까지 추모행렬이 길게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사회 갈등 증폭시 투자심리 불안 요소

최근 급등 증시 단기조정 빌미 될 수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심리 저하 등 충격은 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며 금융시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보다는 최근의 국내외 경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재료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투자자들과 접촉해 본 결과 “다른 악재와 결합된다면 부정적 영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시장은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과거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주말에 해외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 등의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음주 열리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대처할 계획이다.

◇증시, 단기 변동 가능성도=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대형 사건’이지만 경제 문제와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약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

없어 증시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보혁 대결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 투자자들이 일부 불안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들어 국내 증시가 급등하다 지난주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발생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종모 굿모닝신한증권 광주지점장은 “이번 사건이 경제 펀더멘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근 급등한 상태라 ‘울고 싶을때 뺨 때린다’는 격언처럼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영향 없을 듯=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회복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에 있고 북한이 대외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gy@

경제와 무관 땐 반짝 충격 그쳐

대형사건’과 증시 관계는

23일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지만 과거 경제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대형 사건’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내 증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면서도 증시 변동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문제가 북한 변수다.

북한 문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 변수가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1994년 7월8일(금요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에도,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 열린 그해 7월11일(월요일) 국내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7.54포인트(0.79%) 하락하는데 그쳤다. 당시 종합주가지수(현 코스피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전 거래일에 비해 2.11%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했다.

남북해군간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서해교전 당시인 2002년 6월 29일 이후 처음 열린 7월 2일 증시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3.51포인트(0.47%) 올랐다.

역시 메가톤급 충격이었던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32.60포인트(2.41%)와 48.22포인트(8.21%) 급락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했다.

다만,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던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는 종합주가지수가 4거래일간 71.81포인트(13.28%)나 급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종합주가지수는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국가적 불행 … 다시 일어나선 안돼”

재계 반응

재계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깊은 애도 속에 놀라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상의 이현석 전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 일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황 경총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의 좋지 않은 일들이 사회 문제로 반복돼온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라고, 차후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더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당혹스럽다. 그러나 공식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박해철 실장은 “우리나라 민주화 진전에 크게 기여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정중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